

“직장 동료가 흉기 들었다”... 외국인 근로자 범죄 증가

장흥서 술자리 말다툼 하다 살해 고된 노동·열악한 환경 갈등 누적 사생활 보장 안되고 알코올 의존 “갈등 중재·사업주 교육 도입 필요”

광주·전남지역 내에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끼리의 갈등으로 인한 살인 등 강력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낯선 땅에서 우울감과 정서적 고립 등으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다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전에 갈등을 중재하거나 범죄를 예방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일 장흥경찰은 동료 외국인 노동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30대 후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 43분께 전라남도 장흥군 회진면 김 양식 공장 숙소에서 40대 초반 동료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B씨는 지난달 입국해 일을 하고 있었으며 함께 방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2명은 평상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건 발생 전 갈등이 생겼고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을 벌여 A씨가 숙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출동한 119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현재 범행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숙소에는 2명 외에 5-6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숙소 생활을 하는 동료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광주광역시 월곡동에서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외국인이 교회에서 러시아 국적 고려인 3명을 폭행해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1월 15일 오전 0시께 완도 신지면의 한 해조류 양식장에서는 라오스 국적의 C(37)씨가 같은 나라에서 온 D(27)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왼쪽 팔을 다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가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던 중 D씨가 “소리를 줄여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지역의 최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범죄는 매년 1400여건에 달한다. 폭행 및 절도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특

히 살인사건도 매해 1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된 노동과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속에 동료 간에 갈등이 누적되면서 사소한 마찰도 극단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 숙소는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고, 스트레스 해소 수단도 제한적인 상황에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갈등이 생겨도 중재해 줄 이가 없다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시켜 다국적 언어 전문가와 상담사를 배치해 갈등 조기 발견 및 중재를 돕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직장관리 교육 프로

그램’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범죄 예방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정규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계절근로자 등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기 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폭력의 허용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범죄 예방 교육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외국인 근로자 대상 정착 범죄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범죄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유철·이정준 기자**

전남여성, 재학생 위한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

2011년 이후 15년 연속 개최 50여 졸업생 자발적 모교 방문 취업·진학 위한 실질적인 조언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이하 전남여성)가 최근 재학생을 위한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2011년 이후 15년 연속 꾸준히 이어져 온 학교의 대표 진로 프로그램으로 공무원,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 선배들이 참여해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와 직장생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시간이다.

올해는 황금연휴가 있는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50여 명의 졸업생 선배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교실마다 진지하고 생생한 대화가 오갔고 진로 탐색을 앞둔 재학생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선배와의 대화는 총 5회차에 걸쳐 진행됐으며 행정직·세무직 9급 공무원, 한국은행·한국부동산원·신용보증기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 종사자, 하나은행·NH농협은행·삼성화재 등 금융권 실무자, 그리고 여러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에서 활약하는 졸업생들이 참여해 폭넓은 진로 조언을 전했다.

학생들은 관심 분야별 교실을 자유롭게 오가며 선배들과 밀도 높은 질의응답을

나눴다.

이번 행사에서는 ‘선 취업 후 진학’에 대한 관심도 특히 높았다.

졸업 후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성장해 온 선배들의 현실적인 조언은 후배들에게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었다.

매년 전남여성 졸업생 선배들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홍익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등 주요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취업을 앞둔 박하영(19) 학생은 “막연했던 취업 준비가 선배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었다”며 “현장에서 들은 생생한 경험담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전남여성 최규명 교장은 “이 행사는 졸업생과 재학생이 서로의 경험과 에너지를 나누는 소중한 기회”라며 “학생들이 취업이나 진학, 어떤 길을 선택하든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학교가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여성은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 개발 사업,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 특성화고 미래역량 강화사업, 빛고를 혁신학교 등으로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졸업생과 재학생을 위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전남여성은 공무원, 공공기관, 금융권, 대기업, 중견기업 등 우수한 취업처에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한 취업 사관학교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유철 기자**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는 최근 재학생을 위한 ‘졸업생 선배와의 대화’를 진행해 공무원, 공기업, 금융권,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졸업생 선배들의 실질적인 취업 노하우와 직장생활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달했다. **전남여성 제공**

광주 의대생 대규모 유급 불가피... 전남대·조선대 대상자 다수

교육부, 오늘까지 현황 제출 요청

교육부가 의대생 유급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지역 의대에서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교육부는 전국 의대에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 사정위원회 개최일 등 관련 현황과 향후 계획을 이날 또는 오는 8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은 이날 오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고, 조선대학

교 의과대학은 교수회의를 거쳐 8일 제출할 예정이다.

전남대 의대는 학칙에 따라 의학과 3·4학년 학생이 실습 과목에 주 2회 이상 결석하거나 F학점을 1개 이상 받을 경우 유급 대상이 된다.

전남대는 의학과 전체 재학생 893명 중 697명이 휴학을 신청했으며 복귀 학생은 10% 미만으로 파악돼 약 70%가 유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대는 지난 달 17일, 실습에 불참한 3·4학년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유급 예정 사실을 통보

했다.

조선대 의대 상황도 마찬가지다. 총 재적 학생 878명 중 689명이 휴학 중이며 현재 휴학 중인 24학번을 제외한 학생들의 출석률은 10%대에 불과하다.

조선대는 지난 달 18일, 24·25학번을 제외한 재학생들에게 수업 이수 기간 경과를 안내했다. 이들에게는 학년말에 유급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전남대와 조선대 모두 유급 횟수 초과로 인한 대규모 제적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철 기자**

목포해경, 연휴기간 응급환자 10명 이상

섬마을 환자 신속히 육지로 옮겨

목포해경이 가장 6일동안 이어진 어린 이날 연휴 동안 섬마을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들을 신속히 육지로 옮기며, 생명 구조 임무를 수행했다.

7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관할 도서지역에서 접수된 응급환자 10명을 긴급히 이송했다.

특히 어린이날인 5일에는 신안 마진도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80대 여성이 혼수 상태로 발견돼 경비함정을 급파, 환자를

육지로 이송했다.

앞서 3일에도 신안 흑산면에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80대 남성을 병원으로 안전히 이송한 바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도서지역은 의료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고령 인구가 많아 해경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섬마을과 육지를 연결하는 생명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만 총 108명의 응급환자를 육지로 이송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도시철도 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필요”

전국 6개 운영기관 노사 건의문

광주광역시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들이 7일 기후위기 및 초고령사회에 발맞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 운영을 위한 대안 모색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노사 대표자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해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지만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588억원의 무임승차 손실비용이 발생했다.

이에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맹성규 국회의원) 및 민주당·국민의힘,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됐다.

조익문 광주교통공사 사장은 “공동건의회를 시작으로, 정부의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시행을 위해 전국 도시철도 기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며 “도시철도가 공공교통으로서 지속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